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몰려

농림축산식품부, 1200명 모집 3326명 신청 경쟁률 2.8대 1 기록… 3년간 최대 월 100만원씩 지원

정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자 3326명이 몰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200명 모집에 3326명이 신청해 경쟁률 2.8대 1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농 육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영농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3년, 2년차는 2년, 3년차는 1년) 지원한다.

신청 결과를 성별·연령별로 보면 남성이 2749명(82.7%)으로 여성(577명·17.3%)의 4.8배나 됐다. 30~39세(2249명·67.6%)가 18~29세(1077명·32.4%)의 2배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02명(18.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남 536명(16.1%), 전북 478명(14.4%), 경남 376명(11.3%), 경기 347명(10.4%), 충남 308명(9.3%), 강원 227명(6.8%), 제주 88명(2.6%) 순이었다.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6명(4.4%)이 신청했다.

영농 경력별로는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독립경영 예정자(1483명·44.6%)가 절반 가까이 됐다. 독립경영 1년차는 953명(28.7%), 2년차는 541명(16.3%), 3년차는 349명(10.4%)으로 집계됐다.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을 한 본인명의 영농 수행자를 말한다.

또 도시에서 귀농했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2376명(71.4%)으로, 재촌 청년(950명·28.6%)보다 2.5배 많았다.

신청자들 중 농촌에 부모의 영농 기반이 있는 경우는 2224명(66.9%)이었다. 그러나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1102명(33.1%)이나 됐다.

농업계 학교 졸업생은 전체 신청자의27.1%(901명)였다. 나머지 72.9%(2425명)은 농업계 학력이 없는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였다.

이밖에 부부공동 창업자(예정자 포함)는 793명(23.8%)이었고, 농업법인 공동 창업자도 98명(2.9%) 있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한 여타 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10명중 6명이 후계농 육성자금지원사업(1925명·57.9%)도 신청했다. 농지은행 매입·임차지원사업에는 1491명(44.8%),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에는 1019명(30.6%), 농업법인 인턴사업에는 591명(17.8%)이 각각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시·군 단위 서면 평가에서 시군별 사업 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에 시·도 단위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께 120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서면·면접 평가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여 간 콜센터(1600-0255)를 설치·운영해 총 4147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농림식품 관련업 부가가치 최소 130조

국내 농림식품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가가치가 최소 130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사자 수도 국내 전 산업 종사자 수의 20.2%로 추계됐다. 5명중 1명 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담긴 '농림식품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 연구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기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계한 결과다.

농림식품 관련 전산업 부가가치는 국내 경제 전체 부가가치 1355조의 9.6%에 해당하는 130조2000억원으로 추계됐다.

농림식품산업 부가가치는 77조8000억원(5.7%), 전후방 연관산업은 52조4000억원(3.9%)이다. 농림업만 떼내어 추계한 부가가치는 28조5000억원(2.1%)이었다.

농림식품 관련 전 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경제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9.7%)보다 낮지만 미국(5.7%)과 네덜란드(5.5%) 등보다는 월등히 높다.

또 농림식품 관련 전산업 종사자 수는 477만명으로 추계됐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종사자 수 2357만명의 20.2%를 차지한다.

농림식품산업 종사자는 331만명(14.0%), 전후방 연관산업은 146만명(6.2%)으로 각각 분석됐다.

서홍석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업화 진전에 따라 농림업 부가가치는 정체되고 있으나 농림식품산업 전체 부가가치와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외식산업, 서비스 및 지식산업등 농림식품산업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배상두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농림업 생산부문과 관련 산업들의 성장 추세에 관심을 기울여 신산업 분야 개척 등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훈훈한 설 명절 보내세요"

전북은행, 남원시에 선물꾸러미 100상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선물꾸러미 100상자(환가액 250만원)를 남원시에 직접 방문 전달했다.

선물꾸러미상자 안에는 라면, 김, 식용유, 간장, 당면 등 총 10종의 생필품으로 가득 채워져 온가족이 모여 명절음식을 장만하여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 사랑이 두 배로 느껴졌다.

전북은행의 2018 '설 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은 곧 은행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대표의 거점 은행으로서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밀착형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선물꾸러미 100상자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에게 설 명절을 보다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 '역대 최악'

중국과 사드 갈등 영향… 중국인 관광객 급감

지난해 '사드 갈등'의 여파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서비스수지가 역대 최악 수준의 적자를 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연중 344억7000만달러 적자를 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37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월별 기준으로도 역대 1위였다.

서비스수지가 안좋았던 것은 지난한 해 여행수지 적자가 컸기 때문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연중 171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서다.

지난해 입국자수는 133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7% 감소했는데 이중 중국인 입국자수는 48.3% 줄어들었다.

반면 출국자수는 264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4%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여행수지는 지난해 최악이었다"며 "지난해 7월 중국인 입국자수가 바닥을 찍은 뒤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드 갈등이 풀리면서 희망적으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를 포함하는 경상수지는 지난해 연중 784억6000만달러 흑자로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가 악화된 탓에 흑자 폭은 2016년(992억4000만달러)보다 축소됐다.

다만 상품수지는 1198억9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지난 2015년(1222억7000만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한 덕분이다. 상품수지에서 수출은 지난 2016년 -5.7%에서 12.8% 증가로 지난 2013년(2.4%)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지난해 316억8000만달러로 지난 2012년(306억30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70억500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였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755억4000만달러로 지난 2016년(632억달러)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호조를 띈 영향이다.

/뉴시스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행사

기존대출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권 등 이자부담 줄여

지난해 한 저축은행을 통해 1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A씨는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해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25.9%에서 23.9%로 2%p 인하됐다. 연간 약 3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 차주도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중 저축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안내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상태 개선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 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연체를 하지 않고 정상 거래를 이어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CB(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 조회는 4개월에 1번씩 무료로 가능하다.

또 대출만기 연장 신청시에는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시 내부 금리정책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로 거절시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며 적극적인 행사를 당부했다.

한편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최고금리 초과차주에 대한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전에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땐 연24% 이내로 약정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개선 및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시스